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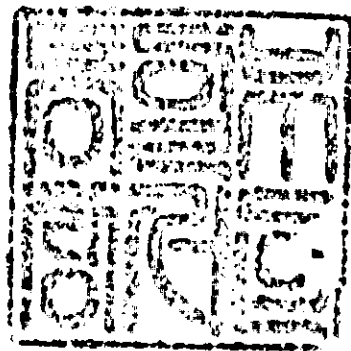
〈차 례〉

1.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

2. 통일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

3. 통일과 현 대북정책

4. 대북정책 추진 성과



5. 통일 실현을 위한 노력

1.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

0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「민족공동체 통일방안」에 나타나 있음.

- 정부는 '80년대말 수많은 국민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공청회 등을 통해 '89년 9월 「민족공동체 통일방안」을 확정했으며, 그 후 이를 일관되게 전지해 왔음.

* 국민의 정부도 「민족공동체 통일방안」을 계승·전지함을 확인('99.10.26, 국회본회의 통일부장관 답변)

0 「민족공동체 통일방안」은 '자유, 평화, 민주'를 통일 원칙으로 하여

- '화해협력→남북연합→통일국가'라는 단계적·점진적 통일방안임.

- 통일국가의 궁극적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「1체제 1정부 1국가」이지만,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, 「남북연합」이라는 과도적 중간과정을 갖도록 상정하고 있음.

0 「남북연합」은 현존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 정부간 협력기구를 구성·운영하는 체제이자 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임.

- 따라서 「남북연합」은 남북간 '평화공존'을 전제로 하여 제 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단계임.

- 「남북연합」에서는 '남북정상회의', '남북각료회의', '남북평의회', '공동사무처' 등 남북협력기구가 설치·운영됨.

•

•

○ 「남북연합」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국가를 준비하려는데 있음.

- 분단상황의 평화적 관리, 경제·사회·문화 분야의 민족공동체 형성, 통일국가의 법과 제도 마련 등

○ 따라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은 먼저 '민족사회 통합'이라는 「사실상의 통일(de facto unification) 상황」을 실현한 후

- 남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「법적 통일(de jure unification)」을 실현한다는 단계적 접근을 의미함.

○ 또한, 우리가 지향하는 「통일국가」는

①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

②시장경제체제로 번영·발전하는 국가

③정의로운 복지국가임.

-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이 확인된 세계사적 조류와 일치하는 것이며

-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인 「민주주의와 시장경제, 생산적 복지」와도 같은 맥락임.

* 공산주의의 이념과 체제는 이미 존립가치를 상실했으며, 탈냉전시대를 맞아 인류 보편적 가치인 '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'를 벗어난 통일의 길은 있을 수 없음.

〈 남북한 통일방안의 차이점과 공통점은? 〉

- 우리는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를 지향하되,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과 민족사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「남북연합」이라는 통일준비 과정을 갖자는 입장임.
 - 이에 반해 북한은 '80년부터 「고려연방제 통일방안」을 통해, 남북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, 즉각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1연방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자는 입장이었음.
- 연합(聯合, confederation)과 연방(聯邦, federation)의 근본적 차이점은 「중앙정부」가 존재하느냐 여부임.
 - 연합제에서는 2정부를 유지하면서 남북간 협력기구를 갖자는 것인데 반해, 연방제에서는 2정부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외교·군사권을 갖는 중앙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임.
-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 양 정상은 남측의 「연합제」안과 북측의 「낮은단계 연방제」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,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음.
- 「남북연합제」안과 「낮은단계의 연방제」안의 공통점은
 - 현 시점에서 당장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통일의 중간단계, 과도기를 설정함.
 - 과도기에서 남북 정부가 각각 내정·군사·외교권을 갖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함.
 -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실시로 '先 민족통합 後 제도통일'방식의 접근을 함.
 - 남북간 협의체를 구성함.(연합제에서는 '남북연합기구',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'민족통일기구'로 명명)

〈 북한의 통일방안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? 〉

-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연방국가로의 통일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을 인정했다고 할 수 있음.
 - 북한이 주장해 온 「연방제」에 의하면 군사권과 외교권을 갖는 통일중앙정부가 있어야 하나
 - 「낮은단계 연방제」에서는 군사·외교권을 남북의 정부가 그대로 보유한다고 인정하여 「남북연합」에 접근해 오는 모습을 보였음.
 - 즉 남북이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하고 화해협력하며 통일을 지향하자는 우리측 「연합제」안에 사실상 동의한 것임.
- * 북한은 2000.10.6 「낮은단계 연방제」에 대해 설명하면서 ‘남북의 현 정부가 내정·군사·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「민족통일기구」를 내오자’고 주장
- * 2001년 8.15에 범민련의 강령 규약 개정시 ‘연방제, 주한미군철폐, 국가보안법 철폐 등’ 고려연방제 실현을 위한 핵심적 요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북한의 정책변화를 뒷받침
- 다만 북한으로서는 「고려연방제」를 금과옥조처럼 주장해 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「낮은 단계의 연방제」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됨.

2. 통일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

0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음.

- ① 남북간 상호 체제 인정·존중 ② 전쟁 방지 및 긴장 완화 ③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 ④ 북한의 변화 ⑤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 ⑥ 통일국가의 법과 제도 마련

0 이 해결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
① 남북간 상호 체제 인정·존중

- 그 동안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타도의 대상으로 여겨 왔음.
- 이로 인해 남북간에는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었고 평화적 통일을 논의하기조차 어려웠음.
- 따라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과 북이 서로 상호 실체를 인정·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선행조건임.
- * 남과 북은 '남북기본합의서'(1992년 2월)를 통해 남북간 상호 인정·존중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'남북공동선언'(2000년 6월)을 통해 상호 인정·존중을 본격화하였다고 할 수 있음.

② 전쟁 방지 및 긴장 완화

-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상태는 분단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왔고 이를 고착화 시켰음.

- 또한 남북한의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함으로 인해 그 자체가 전쟁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,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음.
- 따라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대결상태를 해소하고, 점진적으로 상호 축소지향의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함.
- * 남과 북은 '남북기본합의서'와 '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'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군사적 사항들에 합의한 바 있으며,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(2000년 9월)하여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하였음.

- ①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
- ② 군사공동위원회 운영
- ③ 대규모 부대이동·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
- ④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
- ⑤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
- ⑥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 및 단계적 군축 실현
- ⑦(군비통제 및 군축 관련) 검증

③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

-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.
- 남북관계 개선은 남과 북이 보다 많은 대화와 접촉을 진행하고, 경제협력을 하며,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고, 사회문화적 교류도 적극 추진할 때 가능한 것임.
-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확대하여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것임.

④ 북한의 변화

- 북한이 폐쇄사회를 유지하는 한 남북간 화해협력은 불가능하며, 한반도의 불안요소가 됨.

•

-

•

- 북한이 서방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, 국제기구에 참여하며, 국제시장과 협력하도록 해야함.
- 특히 북한과 미국·일본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임.
- 북한과 미국·일본과의 적대관계 청산,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는 한편, 북한도 안보위협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함.
-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게 되면 탈냉전시대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임.

⑤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

- 남북간 실질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정치적·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실현하고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함.
- 이러한 실질적 평화보장조치가 마련되면 현재의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음.
-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, 중국 등 관련국가가 이를 보증하는 방식의 평화협정 체결이 바람직할 것임.

⑥ 통일국가의 법과 제도 마련

-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통해 제반 분야에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어 「사실상의 통일」이 이루어지면, 통일헌법이나, 통일정부 등과 같은 통일국가의 법·제도를 마련해야 함.
- 이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, 추후 민족구성원 모두의 의사에 따라 논의되어야 할 장기적 과제임.

3. 통일과 현 대북정책

0 지난 50여년간 지속된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감안할 때,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사회를 통합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함.

* 분단기간 동안 교류협력이 꾸준히 지속되었던 독일에서조차도, 통일 이후 사회·문화적 통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음.

0 현 대북정책의 목표는 「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」 임.

-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

-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

-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어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를 실현시키자는 것임.

0 이는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화해협력구도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임.

- 당장 「법적·제도적 통일」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,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

- 남북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오고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함께 번영하며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「사실상의 통일」 상황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임.

- 현 대북정책이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「사실상의 통일 상황」이 법적·규범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「남북연합」임.
 - 즉 현 대북정책은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점진적·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룩하려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실천하고 있는 것임.
 - * ‘완전한 통일국가’의 실현은 미래의 문제로, ‘사실상의 통일상황’ 구현을 통해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평화가 공고해질 때 가능

- 정부는 「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」이라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원칙을 실천해오고 있음.
 - ①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: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에 근본적 변화가 없고 남북의 대규모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함.
 - ②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: 반세기 동안 상호 이질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일방적 흡수통일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이를 배제하고, 먼저 민족동질성 회복을 선행시키고자 함.
 - ③남북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: 남북간 화해협력은 민족의 복리를 도모함과 더불어 남북간 호혜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것임.

- 또한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 ▲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▲정경분리에 입각한 민간 교류·협력 ▲호혜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협력 ▲인도주의에 의한 대북지원 ▲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등을 추진하고 있음.

〈 현 대북정책 추진 배경은? 〉

- 현 대북정책(대북화해협력정책)은 다음과 같은 통일 환경의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.
 - 첫째, 국제적으로 이미 냉전은 끝났으며, 공산·사회주의 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·시장경제체제의 위협이 될 수 없음.
 - *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, 독일 통일, 소련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중국,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 등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
 - 둘째, 이미 남북간 국력 격차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며,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한 억제력을 갖고 있음.
 - * 2000년 기준 남북 국력 비교 : 국민 총생산 27배, 무역 규모 169배
 - 셋째,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조기 붕괴 가능성은 낮음.
 - * 1990년 이후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, 이에 따른 외화난, 식량난, 에너지난 심각
 - 넷째, 북한이 대남 군사노선과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보위협은 상존함.
- 이렇게 변화된 통일환경에 바탕한 현 대북정책은 안보를 튼튼히 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, 적극적인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임.

4. 대북정책 추진 성과

○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간 긴장완화와 실질적 협력관계 진전을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정책의 현황과 성과는 다음과 같음.

○ 안보 태세면에서

- 자주국방력의 지속적 증강과 한미연합전력 유지를 통해 우리의 국방태세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으나 북한의 군사력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정체되고 있음.
- 우리 군은 6.25 이후 최초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무력으로 응징(연평해전)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도발의지를 꺾었음.
- 국민들은 안보열세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갖게 되었음.

○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면에서

- 휴전선에서 도발과 비방·증상이 중지되는 등 과거에 비해 남북간 긴장이 현저히 완화되고, 평화정착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.
 - 경의선 철도연결 합의 등을 계기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실질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되었음.
 -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로 '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확산되었을 때나 '99년 연평해전이 발생했을 때 전쟁위기가 확산되지 않았음.
- * 북한이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해 최전방 해군기지인 장전항을 개방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초기지로 전환시킨 것도 의미

0 남북관계 개선면에서

-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.
 - * 「6·15 남북공동선언」을 통해 분단의 지난 세기를 마감하고, 화해협력의 새로운 세기를 여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
- 다양한 남북간 대화를 통해 실질문제를 협의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.
 - *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장관급회담(5회), 남북국방장관회담(1회), 군사실무회담(5회), 남북적십자회담(3회),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(1회), 경협관련 실무접촉(5회) 등 개최
- 경의선 철도·도로 연결,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등에 합의하였음.
 - * 현재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관련, 비무장지대 이남지역의 공사는 2001년 9월말 현재 거의 완공
 - *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(2001.9)에서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는 대로 비무장지대의 공사를 시작, 빠른 시일내 개통키로 합의
 - * 임진강 공동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공동조사가 11월중 이루어질 예정
- ‘투자보장’, ‘이중과세 방지’, ‘청산 결제’, ‘상사 분쟁 해결’ 4개 경협합의서에 서명, 경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.
 - *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4개 합의서를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합의
 - *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(10.23~26 예정)에서 추가 협의 예정
- 분단 반세기의 가장 큰 아픔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전기도 마련하였음.

- * 3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통해 3,60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, 1만여명이 넘는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
- 연평균 6천명이 방북하고 200개의 기업이 북한에 진출, 위탁 가공교역을 하는 등 인적·물적 교류도 대폭 증대되었음.

	'89~'97(9년간)	'98~2001.8(3년반)
교역액	총액 15억 4,569만 \$ 연평균 1억 7,174만 \$	총액 12억 3,372만 \$ 연평균 3억 4,008만 \$
인적왕래	2,980명 (방북 2,405, 방남 575)	23,427명 (방북 22,514, 방남 913)

o 북한의 변화면에서

-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개방과 의존도가 제고되었음.
- * 북한은 식량 20% 이상, 석유 50% 이상을 무상원조에 의존
-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대감도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-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건설을 최우선의 과제로 제시하면서, 새로운 사고를 가지라고 촉구하는 등 변화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.
- * 김정일 위원장은 2001.1.4 노동신문 어록 발표를 통해 “과거의 낡고 뒤떨어진 것을 과감히 버릴 것”을 촉구

o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측면에서

- 핵·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비롯한 미·북간 현안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.

- 미·일·중·러 등 주변국가와 EU국가들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.

* 2000.1 이후 북한은 서방 17개국과 수교

○ 이 같은 결과를 통해, 이제 우리는 「사실상의 통일 상황」의 「시작단계에 진입」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.

- 이러한 상황이 진척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, 많은 시련과 난관도 있을 수 있음.
- 그러나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은 분명하며, 앞으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이 필요함.

〈 현 대북정책이 실패라는 주장은? 〉

-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▲북한 체제의 완전한 변화 ▲대남 적화전략의 공식적 포기 ▲대남 군사위협을 현저한 감축 등에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대북정책의 실패를 주장하기도 함.
-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현 대북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며,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.
 - 현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중단한다면, 오히려 이러한 성과 달성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임.
- 또한 현 대북정책을 실패라고 하는 것은, 그 동안 우리 국민의 70%~80%가 대북정책을 지지해 온 결과와 배치되는 주장임.

〈 여론조사 결과 대북정책 지지율 변화 추이〉

* 80.4%('98.6) → 65.3%('99.10) → 74.0%(2000.3) → 93.7%(2000.6)
→ 83.5%(2001.2.) → 76.7%(2001.6.) → 76.8%(2001.9.)

— <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분출되는 원인은? > —

-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, 때에 따라서는 일부 이견이 강하게 분출되어 국론이 분열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임.

-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강하게 분출되는 원인은 남북관계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비롯됨.
 - 남북관계는 적대관계와 화해협력관계가 병존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, 국민 내부에도 냉전의식과 탈냉전의식이 혼재해 있음.
 - * 예를들면, 국제적으로 '공산체제 붕괴'라는 객관적 현실에도 불구하고, 우리 사회에 '공산화'의 공포감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.
 - 북한을 보는 시각과 북한 변화를 재는 잣대가 서로 다름.
 - 따라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념적 견해 차이가 첨예하게 나타나기도 함.

- 또한 화해협력과 평화 실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시키는 비용 부담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.
 - 이는 현대사회에서 공공적 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함.
 - * 마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 건립에는 동의하면서도 화장장이 자기 동네에 건립되는 것에는 반대하는 현상과 비슷함.

•
•

•
•
•

•
•
•

•
•
•

•
•
•

5. 통일 실현을 위한 노력

- 우리의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국토나 제도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새로운 민족국가를 세워나가는 것임.
 -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그 근간이 되어야 함.
- 현 남북한의 현실로 볼 때 당장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, 이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너무도 크다는 점에서 통일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.
 - 통일은 장기적 과제인 만큼 우선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중요함.
- 남북이 '평화공존'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늘려 나감으로써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'사실상의 통일' 상황을 이루어야 함.
 - 이 같은 '평화공존'과 '사실상의 통일' 상황을 제도화한 것이 '남북 연합'임.
- 정부는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.
 - 평화가 없이는 남북관계의 개선도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임.
-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여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를 구현시킬 것임.
 - 경의선 철도·도로 연결로 남북의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고, 북한

1
-
0
2

3
-
4
5

6
-
7
8

9
-
0
1

2
-
3
4

개성 지역에 공단을 만들어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물품을 생산·판매하며, 북한 주민들은 여기서 일하며 임금을 받도록 할 것임.

0 그리고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편지를 교환하며 궁극적으로 재결합하여 살도록 할 것임.

- 나아가 남북의 주민 누구나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임.

0 이렇듯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룩하고, 경제·사회·문화 등 다방면에서 서로 교류협력을 하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갈 것임.

0 이러한 「사실상의 통일」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족구성원 모두의 의사에 따라, 법적·제도적으로 1국가 1정부의 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임.

- 통일의 완성 시기는 남북한의 의지와 역량, 그리고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움.

* 다만 현재의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남북관계 개선 추이가 지속된다면, 북한의 변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20~30년 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.

0 통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들어 가는 것이며,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의 노력 여하가 중요하다 할 것임.

•
•
•
•

•
•
•
•

•
•
•
•

•
•
•
•

•
•
•
•

〈 통일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은? 〉

-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.
 - 안보태세를 튼튼히 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불가능하게 하며, 만일 도발시에는 신속히 제압할 것임.
 - 보다 근본적으로는, 탈냉전 국제질서와 가공할 첨단 군사력 하에서 남북이 대결하는 것은 민족 공멸 행위가 될 것임.
 - 공산주의 실패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증명된 역사적 흐름과 남북간 국력격차의 심화를 감안해 볼 때 남북관계는 우리가 주도해야 함.
 - 우리는 이제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 북한에 접근하고 북한을 다룰 때가 됐음.
 - 전쟁방지·평화정착·남북관계개선·북한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하고, 교류·협력하고, 북한을 지원하는 활동이 필연적으로 요구됨.
 - 이러한 활동에는 비용이 수반되며, 이 비용은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투자임.
-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▲통일을 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▲그 과정에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▲여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▲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임.

